

고소득 원예산업 기반 조성 집중

전북도, 스마트팜·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사업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에 1277억원 투자

전북도가 원예산업의 첨단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대대적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도는 2021년 고소득 원예산업 기반 조성 4개 분야 24개 사업에 1,277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정보통신 기술을 농장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보급한다.

'스마트팜'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아 전북 미래 농업을 이끌 주력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내용은 시설 외부 온도, 풍속, 조도 내부의 온·습도, 토양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와 영상장비, 환풍기, 천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15억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14억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31억원) 등 3개 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채소류 생산안전제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에 1,015억원을 지원한다.

농작업 편의성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와 농업인의 난방기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봄철 가뭄 등 기상 상황에 노출된

노지채소 재배지에 6억원을 투입,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해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품질 과수안정생산을 위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과실전문 생산단지조성 등에 49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특용작물 및 시·군 특성화된 품목 육성을 위해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역특화 품목비닐하우스 등 150억원을 투자해 시설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시·군에서 정한 특화품목에 시·군의 통합마케팅 조직과 출하 약정율이 행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와 원예작물 하이베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버섯재배사 증개축, 버섯종균

배양시설, 특용작물 재배 관련 장비, 인삼재배시설 시설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입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원에 농산물 생산·유통사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며 "이제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량의 채소·과일·육류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조성과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로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 국장은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팜사업의 경우,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비중을 매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미세먼지·대기관리 시행계획 온라인 설명회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중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전북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안)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는 연구진과 담당 행정만 참석하고, 시·군 관계자와 일반 도민들은 줌(ZOOM) 영상회의나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 일정에 실시간 참여가 어려운 도민들은 도 홈페이지 내 '전북도 소통대로'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도와 전북연구원은 도민들과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전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안)'의 개요, 대기관리 현황 및 여건분석, 비전 및 목표설정, 추진전략, 5대 분야 67개 부문별 세부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군 관계자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전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수립으로 국가정책 및 전북도 맞춤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영향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 부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받은 후 김정숙 여사의 백신 접종을 지켜보고 있다.

전북도, 자연 친화적 생분해성 어구 보급

전북도가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올해 4월부터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 어업인들에게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분해 어구는 나일론 어구와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

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보급되는 고성능 생분해성 어구는 기존 생분해 어구에 비해 강도는 10%, 유연성은 200%나 향상돼 어획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생분해 그물의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올해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입해 생분해성 어구 총 5,000폭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부담 중 기존 나일론어구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해 어업인 부담을 감소시켰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결핵 퇴치 위한 적극 참여 촉구

검진·치료·접촉자 검진·치료비 지원 등 관리정책 추진

전북도가 결핵 검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24일 제11회 결핵의 날(3.24)을 맞아 결핵 퇴치를 위한 예방과 관리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핵은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서 감염되는 질병이다.

통상 발열, 전신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993년 세계결핵퇴치를 선언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 중 하나다.

도내에는 2019년 인구 10만 명당 전체 결핵환자가 처음으로 60명대에 진입(10만명당 66.5명, 총 1,207명)하며, 전년 대비(10만명당 71.3명, 총 1,307명) 7.6% 감소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2019년 결핵예방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해 결핵 관리를 예방, 조기발견, 환자관리 분야의 보다 촘촘하

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결핵검진 및 치료, 접촉자 검진, 잠복결핵사업,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외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제11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코로나 일상에서도 10년내 결핵퇴치를 위해 의료계, 학계, 민간, 일선 보건소 등 현장의 적극 협력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침예절과 손씻기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부안 앞바다 상생조업 자율협약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경남 근해통발 어업인 체결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 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간 조업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조업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목표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 가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이중조업구역 일부에서는 근해통발조업 금지 및 어구 초과사용 금지, 어업분쟁의 자율적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안 앞바다 1만3,600ha의 이중조업구역에서는 꽃게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

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해통발이 금지된 구역에 대해 법이 9월~11월까지만 한 시적으로 꽃게잡이를 허용했다라도, 연안자망이 주로 조업을 하는 구역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근해통발은 이중조업구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구역을 대폭 축소(약 70%)하고, 연안자망은 어장 선점 목적의 어구부설을 금지하는 등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전북도와 부안군, 이원택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관련 어업인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설득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 자율협약 체결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협약체결을 통한 상생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